

지속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도시화*

- 개념적 고찰 -

최병두** · 홍인옥*** · 강현수**** · 안영진*****

Sustainable Development and New Urbanization: A Conceptual Consideration*

Byung-Doo Choi**, In-Ock Hong***, Hyun-Soo Kang****, and Young-Jin Ahn*****

요약 : 본 논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도시화'의 가능성에 대한 비판을 인정하면서도 이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 '새로운 도시화'를 개념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근대 산업사회의 도시화와 관련된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와 이를 뒷받침한 '발전주의' 전략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환경문제를 통제하기 위하여 등장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고찰하고, 그 동안 이 개념은 주로 산업적 도시화의 결과로 초래된 도시 환경문제를 사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략 - 즉 약(弱)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 에 한정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발전주의' 전략뿐만 아니라 약(弱)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유형화하여, 새로운 도시화를 위한 강(強)지속가능한 발전과 이를 적용한 도시환경 전략을 제시한다. 강지속가능성에 기초한 새로운 도시화는 기존 도시화 과정 및 이를 추동하는 정치경제적 체제에서 벗어나는 전환적 발전을 목표로, 시민들의 자발적 실천과 연대(네트워크)를 통해 자기완결적이고 환경정의적 전략들의 실행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주요어 : 지속가능한 발전, 약/강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도시, 새로운(신) 도시화

Abstract : This paper is to conceptualize 'new urbanization' on the basis of a certain possibility of 'sustainable urbanization' in the capitalist society, while admitting some criticism on its possibility. For this purpose, first of all, this paper points out some economic and environmental difficulties in the Fordist regime of accumulation and the developmentalist strategies which have promoted the modern urbanization in the industrial society. Then,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has been suggested to manage such problems in modern industrial cities, and explores its limitation that the application of this concept has been usually confined to some ex post facto - that is, weak sustainable development - strategies to resolve urban environmental problems. Finally,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both of developmentalism and of weak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paper conceptualize strong sustainable development for new urbanization and suggest urban environmental strategies for strong sustainable cities.

Key Words : sustainable development, weak/strong sustainability, sustainable city, new urbanization.

1. 서론

최근 학문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응

용한 새로운 도시환경이론이 등장하면서, 이 분야의 주도적인 학문체계를 전환시키고 있다¹⁾. 또한 도시 계획 및 설계분야에서도 녹색도시계획, 환경

* 이 논문은 2002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72-BS1521).

**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전공 교수(Professor, Major in Geography Education, Daegu University) bdchoi@daegu.ac.kr.

***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Research fellow, Korean Center for City and Environment Research) kocer@chollian.net.

**** 중부대학교 건설대학 도시계획학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Joongbu University) hskang@joongbu.ac.kr.

***** 전남대학교 사회대학 지리학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yjahn@chonnam.ac.kr.

친화적 건축, 지속가능한 교통계획 등의 개념이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른바 '신도시주의'(new urbanism)의 주창자들도 이러한 도시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전세계적으로 도시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선진국의 도시들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도시환경 담론에 입각하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실천에 옮기면서 도시환경을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도시환경문제를 가시적으로 해결한 것처럼 보이는 일부 선진국 도시들이 과연 환경문제를 유발했던 기존의 도시화 과정을 벗어나서 새로운 도시화과정으로 진입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새로운 도시환경 담론에서 주류를 이루는 개념들 가운데 하나는 '지속가능한 도시화'(sustainable urbanization)라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은 사실 지난 2002년 8월 26일에서 9월 4일 사이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었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지구정상회담'(Rio+10 회의라고도 함)의 주제였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

되었던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초한 리우선언과 더불어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의제 21'이 제안되고, 이를 계기로 전세계의 국가들은 원칙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정책의 기초로 채택하면서, 각 도시 및 지역 단위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지방의제 21' 제정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그러나 '리우+10 회의'는 리우회의 이후 10년 동안의 도시화과정을 환경적 측면에서 오히려 더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환경퇴락과 빈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강조했다.

이와 같이 일부 선진국들에서는 도시환경문제에 대한 상당한 통제와 더불어 도시화 과정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속가능한 도시화'는 아직 제대로 개념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전세계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과제로 남겨져 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도시화'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서 모순적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시화는 본질적으로 무한한

표 1. 도시화 과정의 전환에 따른 사회·도시·환경의 특성 변화

구분		근대적 도시화	후기-근대적 도시화	탈-근대적 도시화
사회구성 기본원리	특성	산업사회	후기(late) 산업사회	탈(post) 산업사회
	기본 지침	발전주의	약(弱)지속가능한 발전	강(強)지속가능한 발전
	기본 관심	물질적 필요(need)의 충족	물질적 욕구(want)와 생태적 필요의 충족	물질적 및 생태적 평등과 환경정의
사회	경제	포드주의 경제	포스트포드주의(I: 경제중심적 위기 극복)	포스트포드주의(II: 생태중심적 위기 극복)
	정치·정책	케인즈적 산업복지 국가와 정책	시장의존적 신자유주의 국가와 정책	네트워크의존 협치(거버넌스)국가와 정책
	사회문화	소품종 대량소비와 물질적 문화	소비 품목의 확대와 상징적 문화	소비 절제(사용가치중심)와 생태적 문화
도시	특성	산업중심 도시	서비스중심 도시	생태중심 도시
	도시공간	광역도시화	세계(첨단기술) 도시화	네트워크 도시화(도시 분산화)
	도시내부	도시 재개발	도시 재활성화	도시(생태적) 복원
환경	특성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의 심화	자연환경 파괴 중단 및 가시적 환경오염 완화	파괴·오염된 자연 환경 복원
	환경정책	정책부재 또는 명목적 정책(자연보호운동 등)	사후적 통제와 규제정책(환경오염 규제,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사전적 관리와 복원 정책(수요관리정책 및 생태계 복원사업 등)
	환경운동	주민환경운동(보상중심)	시민환경운동(자연파괴 및 환경오염 반대중심)	생태환경운동(생태환경 복원 중심)

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시화는 본질적으로 무한한 자본축적 과정에 의해 추동되며, 따라서 한정된 공간환경 내에서 이러한 도시화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속가능한 도시화'라는 개념은 단지 현재 상태의 도시화를 지속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수단이라고 비판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사회가 산업사회에서 후기산업사회 나아가 탈산업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것처럼, 도시화 과정 역시 일정한 단계를 거치면서 근대 산업적 도시화에서 새로운 생태적 도시화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이러한 전환은 어떤 구조적 논리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지와 실천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도시화'의 가능성에 대한 비판을 인정하면서도 이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 '새로운 도시화'를 개념화(이론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근대 산업사회의 도시화의 문제성과 관련된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와 이를 뒷받침한 '발전주의' 전략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환경문제를 통제하기 위하여 등장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고찰하고, 그 동안 이 개념은 주로 산업적 도시화의 결과로 초래된 도시 환경문제를 사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략 - 즉 약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 에 한정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포드주의이후의 축적체제와 이에 따른 도시화과정은 도시환경문제의 해결이라기 보다 경제-기술적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한 전략의 결과라는 점에서 어떤 문제성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발전주의 전략 뿐만 아니라 약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유형화하여, 새로운 도시화를 위한 강지속가능한 발전과 이를 적용한 도시환경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내용과 서술체계의 배경으로서 도시화 과정의 전환에 따른 사회·도시·환경의 특성 변화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이 표의 도시화 유형 구분에서, 후기-근대적(late modern) 도시화란 포드주의적 경제발전과 이에 근거를 둔 근대적 도시화의 문제점을 체제 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반면, 탈-근대적(post-modern) 도시화는 체제를 변화(급진적이든 점진적이든지 간에)시키고자 하는 전략이 전제가 된다.

2. 근대적 도시화와 도시환경의 지속불가능성

1) 산업사회의 도시화와 환경문제

근대적 산업사회와 도시의 발달은 서구 선진국들에서 전개된 산업혁명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방직기와 증기기관 등의 발달을 통해 섬유 및 기계산업을 중심으로 전개된 산업혁명은 석탄 및 철광석 산지의 인근이나 면화나 양모 산지의 주변에 새로운 산업도시들이 등장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원과 원료들의 투입량이 증가했고 기계화된 생산수단을 통해 상품 생산량도 급증했으며, 생산된 상품의 시장판매가 일반화되었다. 농촌에서 새로운 산업지역으로 엄청난 인구가 이동함에 따라 도시는 급속히 성장하게 되었고, 도시 내부에 다양한 기능들이 형성되어 중심상가와 공장지구 및 주거지구간 분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가내수공업에서 공장제 공업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직·주간 분리가 이루어지면서 도시내부 교통량도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은 20세기 초까지, 즉 포드주의가 출현하여 일반화되기 전까지, 대체로 소규모 공장제공업 상태로 진행되었고, 면화와 선철, 석탄 등의 사용량이 급증했다고 할지라도 도시공장지대를 제외하고는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은 우려할 정도로 악화되지는 않았다(최병두, 1999).

이러한 산업화 과정에 따라, 20세기에 들어와서 세계는 양대 전쟁을 치루면서도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했고, 특히 이른바 포드주의적 생산체계 또는 축적체제가 일반화됨에 따라 생산성도 비약적으로 증대되게 되었다. 20세기 초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처음 도입되었던 조립생산라인에 따른 포드주의적 생산체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정착되게 되었다. 그 사이 1930년대 심각한 경제침체를 거치면서 케인즈주의적 국가개입이 필요하게 되었고, 또한 대량생산을 위한 노동자들의 규율과 더불어 대량생산된 상품을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축적체제의 정착

이 이루어졌다. 포드주의는 흔히 대량생산·대량소비체제로 개념화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조립라인을 통한 표준화된 제품생산, 생산체계 내 구상기능과 실행기능 간의 분리, 나아가 새로운 소비양식과 노동력 재생산체계 등을 가져왔다. 이러한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에 기반을 두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경제는 안정적이면서도 급속하게 발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산업화과정과 더불어, 근대적 도시화 과정이 급속히 진행되게 되었다. 대량생산을 위한 대형 생산설비는 대규모 공단이나 공업도시의 발달을 필요로 했다. 또한 기존의 대도시들 내부에 위치했던 생산공정은 생산설비의 대규모화와 더불어 토지의 부족과 엄청난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해 도시주변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도시의 인구과밀로 인한 주거환경의 악화는 주거지의 교외이동을 촉진하였다. 또한 도시간 인적, 물적 자원 이동의 증가와 함께 자동차 보급의 증대는 도시간 새로운 교통로, 즉 자동차 고속도로의 건설을 필요로 했다. 전후 도시의 물리적 복구과정과 대규모 포드주의적 생산설비의 건설, 그리고 도시간 고속도로 건설 등에 따라 건설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건설산업의 성장은 도시 내부에서 남겨진 구공업지대와 주변 불량주거지역들에 대한 재개발을 촉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산업사회의 발달, 특히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의 성숙에 기초한 도시화 과정은 기본적으로 발전주의적 전략에 기초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발전주의'란 더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더많은 산물을 얻어내어 '물질적 필요'의 충족과 경제적 부의 누적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이러한 포드주의와 발전주의 전략은 물론 단순히 기업만이 아니라 국가 및 시민사회 전반에서 실행되었다. 즉 포드주의 축적체제는 안정적 발전을 위한 경제 합리화를 추구하는 한편 원활한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하여 시민사회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케인즈주의적 산업복지 국가와 정책들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또한 도시의 일반시민들은 과거의 빈곤 상황을 완전히 탈피하여 최소한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물질적 풍요를 향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Harvey(1989: 구동희 박영민 역, 1995, 172)는 포드주의란 단순한

생산체계나 또는 축적체제에서 나아가 "새로운 유형의 합리적·모던·대중적 민주사회"를 뜻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포드주의의 경제 및 사회문화적 영향은 도시사회에서 특히 현저히 나타났다. 즉 포드주의에 바탕을 둔 도시화 과정은 경영관리 및 연구개발의 구상기능을 담당하는 본사와 생산라인에 배치된 탈숙련화된 노동력의 실행기능에 바탕을 둔 분공장의 기능적 및 공간적 분리에 의해 촉진되었다. 대규모 생산설비들을 갖춘 분공장들은 지방의 새로운 공업도시나 대도시 주변지역에 입지하는 한편, 도시 내부에서는 기업의 본사와 더불어 이를 지원하는 금융시설들과 대량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백화점 등의 중심상업업무지구가 발달하게 되었다. 도심의 주변 공장이 이전하고 남은 회색지대 또는 슬럼지구는 토지의 집약적 이용과 불량주거의 개선을 위하여 재개발되었다. 도시 내부 및 도시간 교통량의 증대와 도시간 고속도로와 도시내 지하철 등의 새로운 교통시설들의 등장으로 인구 이동의 양과 속도가 급속히 증가하게 되면서, 도시는 콘크리트 건물들과 아스팔트 도로로 뒤덮이게 되었다. 이러한 도시의 인공환경은 이제 생산의 장 또는 자본축적의 장일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는 소비문화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장소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포드주의에 기초한 산업사회의 발달과 도시화 과정은 이에 따른 안정적 경제성장 과 물질적 사회문화의 발달을 가능하게 했다고 할지라도, 도시사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유발하게 되었다. 도시로의 급속한 인구 집중은 도시 내부 및 주변지역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빈민들의 증가와 더불어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 대표적으로 주거, 교육, 보건의료 등의 부족현상을 초래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환경문제라고 할 수 있다. 포드주의적 축적체제는 기본적으로 더많은 원료와 에너지를 투입하여 더많은 상품을 생산하며 또한 더많은 상품을 소비하도록 하지만, 또한 동시에 더많은 자연자원의 파괴와 고갈을 가져왔고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더많은 폐기물들을 배출하도록 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최병두, 1999, 21), 선진자본

주의 국가들은 1950년에서 1973년 사이 23년간 년 평균 생산량의 성장은 4.9%에 달했으며, 인구성장을 감안하더라도 1인당 성장률이 3.8%에 달할 정도로 급속한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시기인 1945년에서 1973년 사이 세계에너지의 소비는 경제 생산량의 증가와 맞먹는 년평균 4.9%의 증가를 보였으며, 또한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1% 증가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즉, 세계 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전제로 하더라도, 이 시기 세계에너지 소비 및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거의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국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에 기초한 선진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은 결국 심각한 환경위기를 초래한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이 기간에서 도시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선진국가들에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체제를 갖춘 산업적 도시화 과정뿐만 아니라 도시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제 3세계 국가들에서도 상당정도 진척이 되었지만, 이러한 도시들에서 발생한 문제는 대체로 고용 및 소득의 문제로 아직 심각한 환경문제로 인식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포드주의적 경제성장이 추진되는 동안, 서구 대도시들은 심각한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을 겪게 되었으며, 그 가운데 일부에서는 대형 사고들(대표적 예로, 1950년대 런던 스모그사건)가 발생하여, 시민들에게 심각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환경위기 의식은 포드주의적 축적체제가 침체위기로 빠져들기 직전인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에 더욱 심각했다. 즉 포드주의적 축적체제는 비록 그 자체 내에 안고 있는 문제점, 즉 생산체제의 경직성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의 유발로 인한 이중적 위기(즉 경제-환경적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되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2) 근대적 도시환경의 지속불가능성

포드주의적 축적체제는 근대적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촉진시킨 엔진이었다. 이에 따라 도시 공간은 인구와 산업의 집합지이며 대규모 생산과 더불어 집합적 소비가 이루어지는 장소였지만,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인간 삶과 생태계의 발달에 부적절한 장소로 변질되었다. 근대적 도시화를 위한 건조환경의 조성과 이에 따른 물질적,

공간적 팽창은 도시 내부는 물론 주변의 난개발로 자연환경의 파괴를 촉진했고, 도시에서 소모되는 자원, 특히 용수와 에너지의 고갈을 유발했다. 또한 대기 및 수질, 폐기물 등 도시환경의 오염이 악화되게 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환경문제로 인한 경제발전의 한계가 초래되게 되었다. 즉, 원료와 에너지원의 고갈은 생산요소의 투입에 한계를 가져오며, 오염처리 시설의 확충은 외부비용을 증대시키고, 결국 이윤(율)을 저하시켰으며, 경제내부의 한계와 더불어 외적 생산조건에 있어서 심각한 제약을 부가하였다.

이러한 도시환경의 위기와 이로 인해 초래된 사회환경적 지속불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 기인하거나 또는 더욱 나아가 물질문명의 편향적 발달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과 더불어 포드주의적 축적체제가 가지는 어떤 한계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따라서 자본주의체제가 계속 유지되거나 물질문명이 번영하더라도 환경문제를 적절히 규제하고 또한 이러한 문제를 유발하는 사회체제를 내적으로 일정하게 개조할 경우, 기존의 도시화 과정이 지속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유형들의 설명은 문제의 발생 배경과 메커니즘을 각기 상이하게 설정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근대적 산업화와 도시화는 더 이상 지속불가능하다는 점에서는 공감하였다.

우선, 근대적 경제발전과 도시환경의 퇴락간 악순환 관계를 유발하는 자본주의적 체제의 문제점 또는 모순을 설명하기 위하여, 정치경제학적 이론을 확대시킨 '자본주의 제 2 모순'론을 고려할 수 있다. O'Conner(1989, 또한 Benton, 1996)에 의해 제안된 이 이론은 맑스가 주장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을 제 1의 모순에서 나아가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다시 생산조건(자연, 사회간접시설 등) 간에 형성되는 모순을 이론화하고자 한다. 즉, 이 이론에 의하면, 선진 자본주의 경제에서, 포드주의적 경제에서 유발된 과잉축적은 경제적 침체를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제위기는 인간 노동력과 더불어 도시 하부구조, 공간, 외적 자연(즉, 생산조건)을 자본주의가 경제적으로 자기 파괴적인 형태로 전유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생태적 위기를 유발한다. 자본주의의 1차 모순에서 2차 모순으로의 전이

는 Harvey(1982)의 '공간적 조정'(spatial fix)의 개념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하비에 의하면, 자본주의 경제는 과잉축적의 위기 상황에서 유희자본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정자본(즉 도시 건조환경)으로 자본의 흐름을 유도한다. 이러한 전이를 통해 자본주의 경제는 일단 위기를 해소하지만, 이로 인해 점점더 비대해진 대도시의 자본은 유동성을 상실하고 부동산시장에서 투기를 만연하도록 할뿐만 아니라, 도시내부 및 주변의 난개발을 촉진하도록 한다. 즉 도시의 건조환경은 자본축적을 위한 새로운 부문이 되지만, 이는 도시경제의 거품(의제자본화)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의 파괴를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정치경제학적 설명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자본축적과 환경퇴락 간의 악순환 고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지만, 구체적인 문제현상의 설명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 방안의 모색에는 이에 보다 적합한 이론이나 개념을 필요로 한다.

다른 한편, 근대적 도시화에 함의된 철학적 한계로 인한 지속불가능성이 지적될 수 있다. 즉, 도시는 기본적으로 인공적인 건조환경으로 구성되며, 따라서 환경의 파괴 또는 자연으로부터 사회의 분리를 전제로 한다. 자연으로부터 사회의 분리에 따른 지속불가능성은 예로 생태학적 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의 개념을 제시한 Rees(1997) 등에 의해 주장된 것이다. 이들에 의하면, 도시는 생태학적 실체이지만, 근대적 도시화 과정은 이러한 사실을 모호하게 한다. 즉, "도시에서 산다는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토지로부터 공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멀어지게 한다. 도시화는 따라서 산업사회에 스며 있는 데카르트적 이원론을 더욱 강화시켜 인간과 자연 간의 정서적 장벽을 만들어낸다"(이창우, 2001, 14에서 재인용). 이로 인해 인간은 더 이상 생태적이지 못하고, 자신의 삶의 토대로부터 괴리되어 지속불가능하게 된다.

근대적 도시화가 봉착한 생태적 한계는 이를 설명하기 위한 또 다른 중범위 이론이나 모형으로 조절이론(또는 경제-기술패러다임론)에 입각한 외연적 축적체제의 한계 또는 이를 일반화시킨 발전주의적 도시화 정책의 한계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산업적 도시화과정은 자원의 양적 개발과 이에 따른 투입량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

키기 위한 물적 토대로서 작용했다. 이러한 발전주의적 도시화 과정에 대한 비판은 도시 건조환경의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정치경제학적 접근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투입의 확대(그리고 이에 따른 산출의 확대와 더불어 부산물로서 환경오염의 확대)에 근거한 '발전주의'에서 과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축적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하면, 한편으로 근대 산업 도시 또는 자본주의적 도시들은 지속가능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즉, 지속가능성은 개념 정의상 어떤 도시가 생산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비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함의하지만, 실제 도시는 자신이 생산하지 않는 엄청난 량의 농산물이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물론 도시는 전체 사회에서 분업을 통해 이러한 상품들을 공급받겠지만, 이러한 생산-소비과정을 내생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발전주의적 도시화에서 벗어나, 자원 및 에너지 투입을 최소화시키고 건조환경의 조성을 억제하는 한편, 생산 및 소비 과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면 사회발전이 지속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포드주의적 축적체제 또는 발전주의적 도시화에서 포스트포드주의적 축적체제 및 지속가능한 도시화로의 개념적 전환을 전제로 한다²⁾. 특히 오늘날과 같이 세계인구가 60억명을 능가할 정도로 엄청나게 증가했으며,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이러한 증가 추세가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세계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도시화는 불가피하고, 따라서 당위적 입장에서 여전히 도시는 지속가능하며, 또한 지속가능해야만 한다고 주장될 수 있다.

3. 지속가능한 발전과 후기 - 근대적 도시환경 전략

1)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브룬트랜드(Brundtland) 보고서인 『우리들의 공동 미래』(Our Common Future, 1987)에서 체계적으로 개념화되었고,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

엔환경개발회의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브룬트랜드 보고서에 의하면,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두 가지 핵심적 개념”을 포함한다. 즉, “하나는 ‘필요’(needs), 특히 최우선적으로 관심이 주어져야 하는 이 세계의 빈민들의 본질적 필요”의 개념이며, “다른 하나는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의 능력에 있어 기술과 사회조직의 상태에 의해 부과된 한계에 대한 개념”이다(WCED, 1987, 46).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단순히 좁은 의미의 환경과 관련되거나 또는 개발과 환경의 조화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현세대 및 미래세대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환경과 발전에 대한 관심을 통합시키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리우회의에서 합의하여 제안된 ‘의제 21’(Agenda 21)에 의하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과 발전의 관심을 통합시켜 이들에 대해 더 많은 주의력을 기울이는 것은 기본적 필요의 충족, 모든 사람을 위한 삶의 수준의 향상, 더욱 좋은 상태로 생태계의 보전과 관리, 그리고 안전하고 더욱 전망이 밝은 미래로 이끌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모든 국가들)가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된다(UNCED, 1992, 37). 이러한 의제 21은 각 국가 및 지역들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관련정책의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인정하도록 했으며, 특히 각국의 도시 및 지역들은 이러한 의제 21에 기초하여 ‘지방의제 21’을 제작하도록 했다.

‘지방의제 21’ 제정 및 시행운동은 근대적 도시화과정에 내재한 다양한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여 앞으로 각 도시 및 지역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이고 할 수 있다. 사실 그 동안의 도시화는 인구나 자원 사용에 전혀 한계를 설정하지 않았고, 그 결과 현재의 생태위기와 경제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화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지속가능한 도시화란 그동안 급속한 산업화와 가속적인 도시화, 특히 무한정한 자본축적의 논리에 의해 추동된 과정에 어떤 한계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제시하는 이러한 한계의 설정은

1972년 로마클럽이 제시했던 단순하고 절대적인 <성장의 한계>가 아니라 어떤 합리적 추론과 정당성을 가진 상대적 ‘한계’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의를 가진다. 즉, 여기서 ‘한계’라는 이념은 기술발전 상태와 사회조직에 의해 부과되는 것으로, 이 두 요건이 현재와 미래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의 수용력을 결정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근대적 산업사회와 도시화 과정에 대해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고자 한다. 특히 ‘발전’의 개념과 관련하여, <우리 공동의 미래>는 이 개념의 양면성을 제시한다. 즉 발전이란 경제적 복지증진을 위한 경제성장을 한 구성부분으로 하며, 다른 한 부분으로 ‘경제와 사회의 점진적 변화도 포함한다’. 사회경제적 변화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 즉 시민들이 결정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정치체제; 자립·지속적 토대 위에 잉여와 기술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경제 체제; 조화롭지 못한 발전에서 야기된 긴장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체제; 발전을 위한 생태적 기반을 지속시키는 생산체제; 지속적으로 새로운 해결을 추구하는 기술체제; 무역과 재정의 지속가능한 형태를 강화하는 국제체제; 자기 수정 능력을 지닌 융통성 있는 행정체제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강조함에 있어 그 장점은, 첫째 이원적이고 서로 상반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온 환경과 개발(또는 발전)의 개념을 결합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했다. 또한 이 개념은 실제 환경 문제에 주목한 의제의 선택을 제시하면서 환경에 관한 다양한 관심을 촉구했다. 특히 이러한 개념의 도입으로 현대 산업도시들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으며, 따라서 기존의 도시화과정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예로, 빈곤)이 환경문제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했으며, 나아가 세대간, 지역간, 국가간, 계층간 환경이용의 평등성을 강조함으로써 윤리적 측면을 내재하고 있다(윤철석, 2000).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도시화 과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에 함의된 구체적인 문제점들도 지적된다. 즉 이 개념은 ① 자연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인류(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 자연은 인간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종속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② 경제와 사회의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발전의 기본적인 지표로서 GNP로 표시가능한 경제성장률에 두고 있다. 즉 생태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들과 사회적 복지 증진을 위한 변수들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다. ③ 지속가능한 발전 모형은 암묵적으로 서구 사회에서 보편적인 단선형 발전모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선진국의 사회경제적 모형을 전제로 개도국의 사회경제가 발전해 나갈 것이며, 생태적으로 건전한 일부 후진국들(또는 원주민들)의 사회생활에 대해서는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 ④ 새로운 부의 창출근거와 자연에 대한 한계 결정자로서 기술을 지적하고 있지만, 어떠한 기술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⑤ 인간의 기본필요를 정의하는 사회구조와 민주적 결정과정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에 내포된 문제점들과 더불어, 이 개념의 기본적 전제로서 시장 기구의 활용을 통해 환경비용의 내부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존적' 지속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세계적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공동의 미래>와 리우 회의가 선택한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 기구의 활용과 환경비용의 내부화 방안이다. 예로, 환경세 및 환경보조금 등을 통해 다시 시장의 가격기구를 내부화함으로써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 방안의 선택은 환경문제를 둘러싼 경제이론들 간의 논쟁에서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승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기업은 비용을 항상 외부로 전가시키려 하며, 또한 현세대의 선호도는 부분적으로만 알려져 있고, 미래세대의 자연자원과 환경에 대한 선호도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 등이다. 환경비용의 내부화에 있어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자연과정에 대한 인간 개입이 야기하는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존에 규정되었던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약지속가능성이라고 칭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벗어나기 위한 대안적 개념으로 강지속가능성의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적 재구성을 논의하기 전에, 기존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현실 사회, 특히 도시적 배경에 응용되는 과정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후기-근대적 도시환경 전략

지속가능한 발전은 모호하고 다의적이며 개념적으로 여러 가지 구체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지라도, 리우환경회의 이후 전세계적으로 현실 환경정책 및 실천전략에 가장 폭넓게 적용되는 기본 지침이 되었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에 의하면, 근대적 산업사회의 발달, 특히 대량생산대량소비를 추구하는 포드주의 축적체제에 기초한 근대적 도시화 과정은 지속불가능한 것으로 이해되며,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수정 또는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에 바탕을 둔 사회-환경정책 및 실천을 위한 원칙과 세부내용에 관한 지표 설정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공간적, 환경적 전략들이 제시되었다.

우선 지속가능한 발전은 특정 정책이나 전략을 위한 세부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기보다는 이들을 설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통합적 지침이라는 점에서, 이 개념의 핵심 내용을 추상화한 몇가지 원칙들이 제시될 수 있다. 예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① 도시를 생태체계로 이해하고, 재화와 에너지 흐름의 자기 완결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폐기물의 최소화과 재활용 체계의 개발); ② 건축물이나 도로 등 도시의 하부시설들, 나아가 도시의 공간구조 전반을 '지속가능성'에 적합하도록 (재)설계·(재)건설한다; ③ 환경오염물질의 제거를 통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오염물질을 유발하는 생산과정, 제품, 그리고 소비양식을 전환시킨다. 또한 도시환경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될 수 있다. 예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주요한 요소로서 토지이용과 교통 그리고 에너지의 문제들

각각 분리해서 관련 대책을 모색하기 보다는 이들을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한편,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각 부문들의 세부 내용들을 분석·평가하고 이에 기초하여 구체적 정책이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지표의 개발이 제안될 수 있다. 환경지표란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부문들의 관측값들 중에서 문제되는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대표적 값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한 척도를 의미한다. 많은 연구자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표들을 제안했으며, 이러한 지속가능성 지표들은 여러 유형으로 분리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환경지표 연구는 대부분 환경 및 이와 관련된 사회공간적 상황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계측·평가하고자 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현세대-인간중심적으로 지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가진다³⁾.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 지표들을 개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존의 노력은 각 부문들 간 관계를 무시한 채 이들을 분절시켜서 독립적 지표로 고려한다는 점에서도 문제를 가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에 기초한 정책이나 전략은 자연환경의 파괴와 오염 및 이를 유발하는 사회공간적 배경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들에서 각 측면에 관한 세부 내용을 가진다. 이러한 분야별 세부내용들이나 전략들에 관해 많은 연구들이 있으며, 특히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입각하여 이들 각각을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초한 정책이나 전략들이 기본적으로 포드주의적 축적체제로 인해 발생한 사회환경적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이들을 적절히 완화시키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이들은 대부분 자연환경을 더 이상 파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나 이미 발생한 환경오염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예로,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에 관한 환경정책은 이들을 유발하는 근본원인의 해소보다는 가시적으로 발생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정도로, 사후적 통제와 규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시민환경운동 역시 기존의 발전주의적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자연파괴 및 환경오염에 대한 통제(예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등)를 강조한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에 기초한 정책이나 전략이 실제 적용과정에서 드러내는 문제성은 한편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기존의 개념이 가지는 한계와 관련된다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정책이나 전략이 적용되는 사회적 배경과도 관련을 가진다. 사실 포드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선진 각국들의 노력이 다양했으며 이로 인해 '포드주의-이후' (after Fordism)의 상황이 국가별로 상이했다. 예로, 영국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국가군들에서는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와 케인즈적 산업복지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장의존적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다 (Gibbs, 1997; 또한 제 3세계의 경우 Burgess et al., 1997).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경제-환경 정책은 포드주의가 내재한 생산체제의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품종소량생산' 체제로 전환하지만, 이러한 전환은 결국 소비품목의 확대를 통해 물질적 욕구를 확대했다. 이러한 물질적 욕구의 확대는 광고 등에 의해 자극된 상품문화나 축제의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장소마케팅 등, 상징적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다양한 이벤트들과 결합했다.

이 과정에서 자원의 소모량과 오염물질의 배출량은 계속 증가하거나 또는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시민들의 물질적 욕구가 상당 정도 충족된 반면, 자연 파괴 및 환경오염의 심화로 인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은 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최소한 수준에서라도 생태적 필요의 충족을 위한 정책들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후적 통제와 규제 정책이 강화되고, 자연파괴의 상태나 환경오염의 정도는 가시적으로는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제 환경문제는 해결되었다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완화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영미국가들에서 포드주의에서 포스트포드주의로의 전환은 기본적으로 환경위기의 극복이 아니라 경제위기의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구조는 여전히 잠재되어 있다고 하겠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의 일부 도시들, 특히 금융 및 정보중심의 세계도시나 첨단과학기술 도시들은 환경문제를 상당정도 해소한 것으로 주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도시들이 환경

문제를 해결했는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청된다. 즉 선진국의 일부 광역도시들은 포드주의이후 단계에서 이른바 '세계도시'로 발전하게 되었다. 즉, 세계화와 정보화를 배경으로 세계 각 지역들간 관련성(즉 경제적 측면에서 볼 경우, 노동의 분업)이 보다 세분화·치밀화되고, 자본(특히 금융자본과 상품화된 지식자본)의 이동성이 초공간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이러한 노동 분업과 자본의 이동성에 결절점으로 작동하는 일부 대도시들은 세계도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도시들은 초국적 자본들의 본사와 세계적 금융자본의 본점이 위치하는 금융도시이며, 정보망의 허브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각종 하부시설들이 구축된 정보도시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세계도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실리콘벨리로 상징되는 첨단기술도시들은 반도체산업에서 출발하여 인터넷산업이나 생물공학산업 등에 기초한 경제적 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첨단기술도시들은 극소량의 소재를 이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환경문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처럼 홍보되기도 한다. 요컨대, 이러한 금융, 정보, 및 첨단기술에 기초한 서비스중심 도시들은 자연자원을 소재로 한 원료 및 에너지원의 투입과 가공 및 생산과 소비로부터 벗어난 경제체제(즉 상품화된 지식의 투입과 더많은 지식의 생산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에 의존하여 발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도시들에서 전력 및 상수도 등의 소비량, 그리고 도시 대기가스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수 등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존의 높은 소비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⁴⁾. 이러한 점에서 서비스중심 도시화과정은 현재적 수준에서 자원소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는 있게 되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4.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재구성과 새로운 도시화 과정

1)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재구성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환경보전과 사회발전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학술적 및 정책적으로 여전히 매우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특히 부정적 입장에 있는 학자들은 이 개념이 현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개념으로 비판한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과 이에 기초한 정책들은 환경 또는 생태계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으로 당면한 환경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현 체제를 지속시키고자 한다는 점이 지적된다. 달리 말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현대 사회, 특히 자본주의 사회가 당면한 환경적 위기의 원인을 체제 내적으로 찾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의 본질을 왜곡 또는 은폐시키는 경향이 있다. 즉,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자연 생태계 그 자체에서 발생한 것이 결코 아니며 사회적인 근본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단순히 현상유지적인 지속가능성이 아니라 사회변화를 동반하는 지속가능성이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형들을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Haughton, 1997; Graham, 1997 등 참조).

이러한 점에서, 우선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발전'의 개념을 재검토할 수 있다. 즉, 발전이란 단순히 현재 상태의 양적 팽창이 아니라 변화를 통한 질적 개선을 의미한다. 이러한 발전의 개념은 생태적 근대화론자들의 주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생태적 근대화론은 "1970년대 독일에서 생태혁신론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던 기존의 혁신개념을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의 개량(근대화의 지속)에 한정시키지 않고, 기본적 제도혁신과 패러다임의 변화(기존 근대화의 단절)이라는 의미"로 이해한다(문순홍, 1998). 즉, 생태문제의 틀과 근대(성)는 쟁을 접합시킨 생태적 근대화론자들은 기존의 피상적 구조혁신 또는 기술적 혁신에 새로운 개념적, 이론적, 방법론적 패러다임 변화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생태적 근대화란 '생태적 적합성'이라는 점에서 경제 및 정치의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생태적 근대화론은 여기서 '생태적 적합성'이 무엇을 의미하며, 또한 이를 위하여 경제정치적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을 하지는 않으며, 또한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내재된 규범적 성격을 부각시키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다른 한편, 도시의 에너지 이용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도시의 정치경제적 요소들과의 관계에서 에너지경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일련의 연구들이 있다. 즉 오늘날 거대도시에서 엄청난 에너지 이용은 결국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특히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에너지계획은 보다 포괄적인 정치경제적 요소들에 대한 변화를 전제로 한다. 왜냐하면, "에너지 전환은 기술, 경제, 정치, 환경, 사회에 영향을 받고 영향을 미치는 변화의 메커니즘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 즉 에너지전환의 장애물은 곧 에너지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원을 둘러싸고 있는 이들 정치경제적 제약요소들에 있기" 때문이다(김종달, 1998, 69-70). 이러한 사실, 즉 에너지 관리가 그 도시사회의 구조와 발전양식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은 뎀포드 등 많은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특히 현대사회의 에너지시스템은 시설의 대형화와 기술의 복잡성을 전제로 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자본집약적이며 중앙집중적인 성격을 가지도록 하며, 이로 인해 기술·경제적, 사회정치적, 및 윤리·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한 경로로 나아가도록

했다. Lovins(1977)는 이러한 에너지시스템과 그 정치경제적 맥락을 경성에너지 경로라고 칭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연성에너지 경로를 제시했다(표 2 참조)(김종달, 1998; 윤순진, 2001).

이러한 경성 및 연성 에너지경로간 구분에 기초한 도시 에너지에 관한 연구는 현대 도시가 가지는 지속불가능한 에너지 활용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좁은 의미의 에너지 문제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에 함의된 정치경제적 요인들 전체를 문제시하며, 이들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특히 두가지 유형의 에너지경로에 함의된 정치경제적 요인들은 현실적 측면뿐만 아니라 윤리적 측면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경성 및 연성 에너지경로간 대조적 구분을 전체적으로 규정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와 결합시키지 못하고, 또한 각 에너지경로로 인한 영향으로 자연환경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생태적 근대화론 및 에너지경로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앞서 고찰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재구성해 봄으로써, 생태적 도시화 또는 탈근대적(post-modern) 도시화에

표 2. 경성 에너지 경로와 연성 에너지 경로

구분	경성 에너지 경로	연성 에너지 경로
기술·경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1차 에너지 사용, 대규모 투자로 높은 초기 비용, 높은 자본집약도 - 단위 규모가 대형, 대기업 중심, 단기계획에 중점. - 복잡한 기술시스템, 높은 간접비 - 시간 경과에 따라 효율성 저하, 공평성 거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규모 최종 에너지 중심, 적정 투자로 낮은 초기 비용, 낮은 자본집약도 - 단위 규모가 소형, 중소기업 운영, 장기계획에 중점 - 덜 복잡한 기술시스템, 낮은 간접비 - 시간 경과에 따라 효율성 증대, 공평성이 비교적 큼
사회·정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방적(유권자와 밀접한 관계없음)이고 획일적 의사 결정에 따른 관리 - 중앙집권화된 에너지시스템 - 정치적으로 통제된 전체주의 경향 - 비민주성과 비창의성, 관료화 및 이권의 개입으로 불로소득의 여지가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적(유권자와 밀접한 관계)이고 다수(또는 다원)주의에 입각한 관리 - 지방분권적 에너지시스템 - 무수한 작은 장치와 다수 소비자 - 민주성 및 창의성의 유인, 주민 적극참여로 불로소득의 여지가 적음
윤리·환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력화·군사화를 암묵적으로 지향 - 에너지 관리가 정치권력에 종속됨 - 환경위험 또는 대형재해 여지가 큼. - 정신적 가치나 전통적 미덕 경시 - 환경오염의 유발가능성이 높고, 지속가능성이 거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적이고 민주적 방향 지향 -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정책의 독립성 - 환경위험 및 대형사고의 위험이 적음 - 정신적 가치 및 전통적 미덕 중시 -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큼

자료: 김종달(1998), 최병두(2001) 참조.

관한 개념화를 모색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재구성하기 위하여, 생태경제학에서 구분하고 있는 약지속가능성과 강지속가능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어떤 시사점을 구할 수 있다⁵⁾. 주류 생태경제학에 의하면, 자연은 경제적으로 유용한 자원이 된다는 점에서, '자연자본'(natural capital)으로 칭해지며, 이러한 자연자본이 노동과정을 통해 가공된 형태를 '가공자본'(man-made capital)으로 칭한다(Costanza and Daly, 1992; 김종호, 2001). 우선 여기서 자연자본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약지속가능성과 강지속가능성은 구분된다. 즉, 약지속가능성론자들은 총자본(=가공자본+자연자본) 스톡이 일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강지속가능성론자들은 자연자본 스톡의 일정을 주장한다. 약지속가능성의 견해는 신고전과 성장모형에서 도출된 것으로 자연환경을 단지 하나의 생산요소(즉 이러한 점에서 '자연자본'으로 칭함)로 취급하고 가공자본과 대체가능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주장을 구체화한 것이 녹색 GNP의 개념이며, 이 개념은 기존의 가공자본의 GNP만으로 사회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에서 자연환경의 상태를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의 지표를 총자본(=가공자본+자연자본) 스톡의 일정⁶⁾으로 설정하는 약지속가능성은 생태계의 고유한 불확실성과 비가역성의 문제를 무시하고, 인간이 자연환경을 의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될 수 있다.

강지속가능성의 견해는, 생태계의 변화는 고유한 불확실성과 비가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공자본을 자연자본으로 대체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생산과정을 물리적 측면에서 보면, 노동-가공자본과 자연자본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공자본은 물질적 변환의 동인인 반면, 자연자본은 변환되는 대상이다)가 존재한다는 점, 둘째 가공자본은 자연자본으로부터 만들어지며, 따라서 더많은 가공자본의 형성은 더많은 자연자본의 소모를 요구한다는 점, 셋째 자연자본의 기능 중에는 가공자본이 쉽게 대체할 수 없는 것들(예로, 대기중 오존층의 역할, 습지의 오염정화기능 등)이 있다는 점 등이 강조된다. 이러한

점에서, 약지속가능성 보다 강지속가능성의 견해가 보다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약지속가능성과 강지속가능성에 대한 이러한 구분은 두 개념이 근거하고 있는 이론적 전제와 규범적 가치 차원에서 차이가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김종호, 2002).

보다 규범적인 측면에서 이 두가지 견해를 보면, 약지속가능성은 세대간 공평성을 '시간에 따른 일인당 소비의 일정'을 의미한다. 이는 롤즈의 '최소 극대화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함의된 세대간 공평성의 개념은 일인당 소비가 모든 세대에서 동일해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한다(김종호 2002에서 재인용)⁷⁾. 그러나 이러한 약지속가능성에서 주장하는 세대간 공평성은 효율성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즉 자연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발달은 자연환경이 가공자본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 세대는 현세대에 비해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방한다. 이러한 견해는 과학기술에 의한 효율성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현 세대 내 자원 배분의 불평등을 무시하고 있다. 반면 강지속가능성은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함의된 세대간 공평성이 효율성에 선행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즉 세대간에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할 자연자본의 스톡은 일정하며, 이는 이용의 효율성 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한 세대 내에서도 특정 집단의 과도한 자원이용은 다른 집단의 자원이용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강지속가능성은 미래세대의 복지라는 명분으로 현재의 불평등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왜곡되지 않아야 하며, 이의 시정을 위하여 세대 내 차원의 분배적 정의 문제를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지속가능성의 유형 구분에 근거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이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새로운 전략에 응용하고자 한다(표 3 참조). 약지속가능도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화의 배경이며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므로 사회체제의 문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발생한 환경문제만을 가시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현상유지적 지속가능성에 따른다. 이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려의 대상은 자연환경의 보전으로, 이른바 친(자연)환경적 정책들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체제를 유지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친환

표 3. 지속가능한 도시의 유형

구분	약지속가능한 도시(weak sustainable city)	강지속가능도시(strong sustainable city)
기본원칙	현상유지적 지속가능성	사회전환적 지속가능성
고려대상	자연환경 보존을 강조하는 지속가능성	사회구조적 변화를 강조하는 지속가능성
메커니즘	효율성을 전제로 한 지속가능성	공평성(환경정의)을 우선한 지속가능성
건설방법	시장/국가-의존적 지속가능성	실천-의존적(시민운동적) 지속가능성

경적 정책은 자원이용과 환경관리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시장의존적 메커니즘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고자 한다⁸⁾. 이러한 지속가능도시는(최소한 일지라도) 도시의 환경문제에 관심을 두고,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정책들을 강구하며, 환경 이용에 있어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가능도시는 환경문제의 근본원인을 간과하고 따라서 사회구조의 전환을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또한 세대간 및 세대내 공평성을 효율성에 대한 부차적 문제로 간주하며, 특히 환경문제에 대한 시장메커니즘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의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문제성을 가진다.

강지속가능도시는 현대(자본주의적) 도시화의 배경이며 환경위기를 초래한 근본원인의 해소를 위한 사회체제의 혁신 또는 전환을 추구함으로써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에 따라 환경문제가 발생한 생태계의 문제를 치유하고 이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유발한 사회구조의 변화(점진적이든 급진적이든지 간에)를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 특히 강지속가능도시는 자원이용과 오염관리의 효율성에 앞서(또는 이와 동시에) 자원이용의 혜택과 오염관리 비용의 공평한 배분을 추구하며⁹⁾, 이를 시장메커니즘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환경계획과 환경운동과 같은 실천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2) 강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전략

산업사회에서 자본의 논리에 의해 추동된 도시화는 지속불가능한 도시화라고 할 수 있다. 자연환경을 변환시켜 축적한 가공자본만이 이러한 도시화의 발전을 가능하는 주요 지표로 설정된다. 즉

산업사회의 도시화는 물리적 개발을 통해 가용자원의 량을 증대시키고, 이렇게 증대된 자원량을 투입하여 표준화된 생산과정을 통해 산출을 확대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산업화 과정과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발전주의 국가에 의해 추진되었다. 이러한 도시화는 그러나 자원이 고갈되거나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불능으로 인해 결국 지속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지속불가능한 도시화 과정(즉 경성적 경로)을 벗어나기 위하여 생산과정의 내포적 효율화와 더불어 자원 투입 및 생산된 제품 배분에 있어서의 공평성을 전제로 하는 지속가능한 도시화 과정(즉 연성적 경로)으로의 전환이 요청되고 있다. 여기서 생산과정의 내포적 효율화만을 강조하는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도시화는 약지속가능도시화, 그리고 이러한 효율화와 더불어 공평성을 전제로 한 도시화는 강지속가능 도시화라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화란 물리적인 환경친화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통합적인 지속가능성을 의미하며, 나아가 도시화를 추동하는 메커니즘의 지속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강지속가능 도시화는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에너지 이용이나 환경오염의 관리에 있어 효율성의 증대 그리고 압축도시 또는 분산형 집중도시와 같이 도시공간의 물리적 구성에 있어서 합리화 이상의 어떤 것을 의미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예로 이창우(1996)는 지속가능한 도시(화)란 미래성, 자연성, 참여성, 형평성 및 자급성 등의 다섯 가지 요소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추구하는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대신 약지속가능 도시와 강지속가능 도시 간을 구분하여, 현

제의 환경위기를 유발한 사회메커니즘을 실천적으로 전환하여 공평성(환경정의)을 목표로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강지속가능 도시(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면, 이제 이러한 강지속가능 도시(화)를 위한 전략들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약지속가능 도시와 강지속가능 도시의 개념에 기초한 도시발전 전략을 살펴볼 수 있다. 약지속가능 도시 발전전략은 가시적으로 드러난 도시환경문제에 직접 개입하여 이를 해결함으로써 현상유지적이고 효율적인 도시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도시 전략은 두가지 유형 즉, 시장 메커니즘을 약간 변경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에 의하여 도시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유시장의존형 모형과 건축물의 조성이나 토지이용 계획의 측면에서 도시를 재설계하고자 하는 재설계지향형 모형을 포함한다. 예로, 에너지 고갈에 직면하여, 자유시장의존형 전략은 에너지 가격의 인상을 추구하며, 재설계지향형 전략은 에너지 효율적인 도시토지 이용을 강구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들은 에너지 고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로 인해 초래될 지속불가능한 도시화 과정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들 각각은 기존의 시장 및 국가가 담당했던 기능을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위한 추진 전략에 적용한 모형들로서, 궁극적으로 각각 시장의 실패와 국가의 실패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성을 가진다.

반면 강지속가능 도시 발전전략은 도시환경문제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이를 유발하는 원인을 규명하여 이를 해결함으로써 자기충족적이며 환경정의적인 도시를 추구한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전략은 오늘날 도시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보다 민감한 관심을 가지고 단지 문제현상의 해소뿐만 아니라 문제의 발생원인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이 유형의 전략은 이윤논리에 의해 작동하는 시장메커니즘이나 국가주도적인 관료제가 아니라 분권화된 정치와 시민적 실천에 의존하는 여러 방안들을 강구한다. 이러한 강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전략은 현대 도시의 환경위기를 유발하는 배경을 벗어나 소규모 분산된 공동체 생활·생산양식을 강조하는 자기충족적 모형(Roseland,

1997)과 환경위기의 발생메커니즘에 직접 도전하여 이를 전환시키고 궁극적으로 자원배분과 이용의 공평성을 강조하는 정당한 배분(fair share) 모형(Harvey, 1996)으로 구분된다. 예로 에너지 고갈에 직면하여, 자기충족적 전략은 가용에너지의 소비 절제를 추구하고, 정당한 배분 전략은 가용에너지의 공평한 배분을 도모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도시의 건설을 위한 이러한 원칙 제시와 더불어 도시의 형태가 논의의 초점이 되기도 했다. 즉, 지속가능한 도시의 중심 요소 가운데 하나는 도시공간구조이다. 도시형태 또는 도시공간구조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에는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로, 도시의 중심적 입지에 직장과 주거를 집중시키는 압축도시(compact city)의 개념은 자원효율적인 도시형태를 지향한다(Breheny, 1995; Jenks and Burgess, 2000). 즉 압축 도시는 토지자원을 가장 적게 이용하고, 고층건물과 교통의 필요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최적 밀도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압축도시를 줄여 에너지 절약을 가져올지 모르지만, 높은 인구밀도로 혼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분산된 집중 형태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브라질 쿠리티바 시에서 보는 것과 같은 선형 집중이 지속가능한 도시공간구조의 최적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박용남, 2000).

이와 같이 도시의 형태와 관련된 논의들을 고려하면, 과도한 압축도시는 비현실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지만, 도시의 외연적 확산 특히 도시 외곽의 난개발은 방지되어야 하며, 또한 한 도시 공간 내에 여러 개의 압축부도심, 또는 대중교통수단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개의 압축도시 공간을 만드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이창우, 2001). 예로 도심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환경친화적 교통시스템을 확립하고 차량진입을 금지시켜 대규모 보행자 전용공간을 구성함으로써 활력 있는 문화와 상호교류를 위한 장소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이와 같이 토지이용과 교통 및 에너지에 관한 통합적 전략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도시 설계는 통행패턴이나 도시공간구조를 바꾸어 자동차 사용의 필요를 적게 느끼도록 하는 도시 형태를

표 4.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전략

구분	약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강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특성	기존 도시화 과정 및 이를 추동한 사회체제내에서의 개량적 발전		기존 도시화 과정 및 이를 추동한 사회체제에서 벗어나는 전환적 발전	
전략의 유형	시장의존형 전략	제설계지향적 전략	자기충족적 전략	환경정의적 전략
전략의 주체	시장(암묵적 통제)	국가(직접적 통제)	시민(네트워크와 자발적 실천)	
에너지고갈에의 대응 사례	에너지 가격 인상	이용 효율성 증대	에너지 이용 절제	정당한 배분

구축함으로써 대기오염의 저감과 에너지 절약 추구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도시인들 간의 상호소통을 보다 원활히 함으로써 생태적이고 인간적인 도시를 만들어나가고 한다.

이러한 점들과 관련하여, 도시성장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개념으로 '스마트 성장'(smart growth)이 제시되고 있다(Katz, 2002 등 참조). 스마트 성장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리를 가운데 도시 및 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과 관련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의 협력과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 성장 전략은 "스마트한 방법, 즉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상호협력을 통한 의사결정방식에 의해 성장을 수용하는 개발 개념"에 불과하다(이왕진, 2003). 이러한 도시 형태나 공간구조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할 점은 도시의 형태가 바로 도시의 특성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압축도시는 단순히 물리적인 압축형태만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가진 자립성의 압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도시의 형태는 일정한 모델로서 존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지방의 특수 여건에 따라 그 지역환경과 지역주민들의 문화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도시 형태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겠다¹⁰⁾.

5. 결론

오늘날 대부분의 인구는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사실 농촌과 도시간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전 국토가 도시화되고 있다. 도시화율이

90%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인들에게 농촌에서 살 것인가 또는 도시에서 살 것인가는 이제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다. 사회형태론적으로 보면, 오늘날 엄청나게 증가한 세계인구는 지구상의 평균 인구밀도를 증대시키고, 이로 인해 보다 조밀하게 집중된 도시 공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도시 생활이 불가피하다면, 도시는 지속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속가능한 도시화는 당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리우 환경회의 이후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실제 정책들에 응용되어 왔으며, 이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시화 과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반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수사와 실행이 상당히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내재하게 된다는 점이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결국 당면한 환경위기를 적절히 통제하여 현재적(즉 자본주의적) 사회발전과 도시화 과정을 지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비록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본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탈이데올로기적으로 개념화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략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 동안 논의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자체를 재검토하여 유형화함으로써, 이 개념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제거하는 한편 이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주요한 의미들은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들과 전략들을 검토해 보고, 기본적으로 약지속가능성과 강지속가

능성의 구분이 현재 개념화의 수준에서는 가장 적절한 유형화라고 평가하고, 이를 도시화의 전개과정에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했다. 즉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와 발전주의적 전략에 바탕을 둔 산업사회의 근대적 도시화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지속불가능한 도시화라고 평가된다. 이러한 지속불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제시되었지만, 흔히 이 개념은 도시환경문제의 가시적 해결에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원인 해결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될 수 있다.

따라서 근대적 도시화의 연장선 상에서 단지 가시적으로 드러난 환경문제의 해결만을 추구하는, 즉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후기-근대적 도시화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 발생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추구하는 탈-근대적 도시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약지속가능한 도시화에서 강지속가능한 도시화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강지속가능성에 기초한 새로운 도시화는 기존 도시화 과정 및 이를 추동하는 정치경제적 체제에서 벗어나는 전환적 발전을 목표로, 국가나 시장메커니즘 양자 어디에도 의존하지 아니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실천과 연대(네트워크)를 통해 자기의존적이고 환경정의적 전략들의 실행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註

- 1)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도시환경론은 흔히 생태도시론이라고도 불린다. 예로, 한국도시연구소, 1998: 시민환경연구소, 2001 등 참조.
- 2) 즉, '지속가능한 도시(화)'라는 용어는 '지속가능성'과 '도시(화)'를 연결한 것이지만, 어법모순(oxymoron)이라고 주장된다(Blassingame, 1998). 이러한 점에서, 어떤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즉, 지속가능성과 도시화간의 모순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화'란 가능한가? 이러한 의문은 '지속가능한 자본주의란 가능한가'라는 의문과 동일한 맥락에서 부정적으로 이해되지만, 현재의 세계인구 상황으로 도시화란 불가피한 것이라면, 자본주의 체제는 변화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지속가능한 도시화가 가능한가'라는 의문에서 '어떠한 도시화가 지속가능한가'라는 의문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이러한 점에서 도시는 어떤 의미에서 유토피아적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된다. 실제 지속가능한 도시(또는 생태도시 등)는 오웬의 뉴하모니공동체, 르코르부

제의 유토피아적 도시설계, 하워드드의 전원도시 등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3) 그러나 예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내재된 도덕적 및 생태적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를 설정할 수 있다(고창택, 2003).
- 4) 예로, 뉴욕에서 1987년에서 1995년 사이 전력소비량은 43,187kWh에서 41,237kWh로, 상수도공급량은 20억톤에서 19억톤으로 약간 줄었다. 반면 파리의 경우는 1990년에서 2000년 사이 전력소비량은 11,549k대에서 12,889kWh로, 상수도공급량은 208백만톤 274백만톤으로 증가했다. 자동차수의 변화에서, 뉴욕은 1998년 2001천대에서 2000년 2021천대로 거의 증가하지 않은 반면, 런던은 1985년에서 2574천대에서 2001년 2743천대로, 파리는 1989년 850천대에서 2001년에는 1022천대로 증가했다(서울특별시, 도시비교통계 참조).
- 5) 그외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생태적 지속가능성으로 구분되는 것처럼(정대연, 2003), 지속가능한 도시의 개념도 인류중심적 접근(또는 light green approaches)와 생태중심적 접근(또는 deep green approaches)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Graham(1997), 김선희(2001) 등 참조.
- 6) 특히 총자본(가공자본+자연자본) 스톱의 일정을 가정하는 약지속가능성의 입장에 따르면, 고갈가능한 자원의 물리적 양이 줄어들어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경우, 물리적 양의 감소가 가격의 상승에 의해 상쇄되기 때문에 이 자원이 완전히 고갈될 때까지 이 자연자원의 스톱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 7) 이러한 점에서 솔로-지속가능성(Slow-sustainability)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Solow(1992) 참조.
- 8) 이러한 점에서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신도시주의'(new urbanism) 역시 약지속가능한 도시화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신도시주의의 문제점에 관하여, Harvey(1995) 및 최병두(2002) 등 참조.
- 9) 이러한 점에서, 강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개념은 환경정의이다(Dobson, 1999). 물론 지속가능성의 개념 자체는 세대(또한 지역 또는 집단)간 공평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미 환경정의를 함의하고 있지만, 환경정의의 개념은 지속가능성의 개념보다도 훨씬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최병두, 2003). 또한 Houghton, 1999 참조.
- 10) 이러한 점에서 어떤 '도시화'가 아닐 개별 '도시'의 특성들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Bookchin(1995) 참조. 그러나 개별 도시의 특성들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사회전체를 규정하는 '도시화' 과정에 대한 분석이 무시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文獻

- 고창택, 2003, 환경정책결정을 위한 가치론적 환경 지표의 설정 - 환경의 '지속가능한 가치'에 대한 철학적 개념분석과 생태학적 지표구

- 성을 중심으로 -, 최병두 외 저, 현대환경문제의 재인식 -학제적 접근-, 한울.
- 구동희 · 박영민(역), 1995,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Harvey, D., 1989,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Blackwell, London).
- 김선희, 2001,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전략, 시민환경연구소 편, 생태도시로 가는 길, 도요새, 27-73.
- 김종달, 1998, “에너지전환의 정치경제 - 제도론적 고찰 -,” 환경정책, 6(2), 53-77.
- 김종호, 2001, 생태문제의 경제학적 수용에 관한 비판적 세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용남, 2000, 꿈의 도시 구리찌바, 이후, 서울.
- 문순홍, 1998,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생태전략 시론, 문순홍 편역,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생태전략, 나라사랑.
- 시민환경연구소 편, 2001, 생태도시로 가는 길, 도요새, 서울.
- 윤순진, 2002, “지속가능한 발전과 21 세기 에너지 정책 - 에너지체제 전환의 필요성과 에너지정책의 바람직한 전환방향 -,” 한국행정학보, 36(3), 147-167.
- 윤철석, 2000,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윤리의 모색,” 도시행정학보, 13(1), 219-234.
- 이왕건, 2003, “도시성장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 국토(2월호, 통권 256호).
- 이창우, 1995,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의 실재론적 이해,” 공간과 사회, 6, 75-101.
- _____, 2001,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와 지속가능한 도시,” 시민환경연구소 편, 생태도시로 가는 길, 도요새, 서울, 9-25.
- 정대연, 2003,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과 합의,” 정대연 · 페트릭 몰린즈 편저,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주대학교 출판부, 32-65.
- 최병두, 1999, 환경갈등과 불평등, 한울, 서울.
- _____, 2001, “도시와 에너지 -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 김형국 편, 불과 한국인의 삶, 나남, 서울, 504-531.
- _____, 2002, “신도시주의 또는 새로운 도시화,” 공간과 사회, 17, 215-239.
- _____, 2003,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환경정의로,” 정대연 · 페트릭 몰린즈 편저,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주대학교 출판부, 115-149.
- _____(역), 1995, 자본의 한계, 한울(Harvey, D., 1982, *The Limits to Capital*, Blackwell, London).
- 한국도시연구소, 1998, 생태도시론, 박영사.
- Blassingame, L., 1998, Sustainable cities: oxymoron, utopia, or inevitability? *Social Science Journal*, 35(1), 1-13.
- Benton, T.(ed.), 1996, *The Greening of Marxism*, Guilford Press, New York.
- Bookchin, M., 1995, *From Urbanization to Cities: Towards a New Politics of Citizenship*, Cassell, London.
- Breheny, M., 1995, The compact city and transport energy consumption,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NS. 20, 81-101.
- Burgess, R., Carmona M. and Kolstee, T.(eds.), 1997, *The Challenge of Sustainable Cities: Neoliberalism and Urban Strategies in Developing Countries*, Zed Books, London.
- Costanza, R. and Daly, H., 1992, Natural capital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onservation Biology*, 6, 37-46.
- Dobson, A., 1998, *Justice and the Environment: Conceptions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Dimensions of Social Justice*, Oxford Univ. Press, Oxford.
- Gibbs, D.C., 1997, Urban sustainability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United Kingdom: exploring the contradictions, *Cities*, 14(4), 203-208.
- Girard, H., 1999, Sustainable cities: a contradiction in terms, in D. Satterthwaite(ed.), *The Earthscan Reader in Sustainable Cities*, Earthscan Publications, London.
- Graham, H., 1997, Developing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models, *Cities*, 14(4).
- Harvey, D, 1995, Cities or urbanization?, *City*, 1/2, 38-61.
- _____, D., 1996, *Justice, Nature and the Geography of*

- Difference*, Blackwell, London and New York.
- Houghton, G., 1997, Developing models of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Cities*, 14(4), 189-195.
- _____, 1999, Environmental justice and the sustainable city,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18(3), 233-243.
- Jenks, M. and Burgess, R.(eds.), 2000, *Compact Cities: Sustainable Urban Forms for Developing Countries*, Spon Press, London and New York.
- Katz, Bruce, 2002, smart growth: the future of the American metropolis? Centre for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Case Paper, 58).
- Lovins, A., 1977, *Soft Energy Paths: Toward a Durable Peace*, Harper Colophon Books, New York.
- O'Connor, M., 1994, *Is Capitalism Sustainable?*, Guilford, New York.
- Rees, W.E., 1997, Ecological footprints: the biophysical factor in urban sustainability, *Ekistics*, 64.
- Roseland, 1997, *Toward Sustainable Communities: Resources for Citizens and Their Governments*, New Society Publishers, New York.
- Solow, R.M., 1992, Sustainability: our debt to the future, *USA Today*, 2568.
- UNCED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92, *Agenda 21: Programme of A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ited Nation, New York.
- 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7,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 Press, Oxford.

최초투고일 03. 11. 11

최종접수일 04. 01. 18